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 당대회 사업총화를 중심으로

김병욱(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논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제7차 당대회의 개최배경을 분석하고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찰했다. 북한체제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당대회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당대회가 갖는 정책노선은 향후 북한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최배경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당대회는 일곱 번 열렸으나 마지막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였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 단 한 차례도 못열었던 당대회를 36년 만인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최악의 경제사정 이었다. 특히 2011년 김정일의 사후, 북한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 5년 차를 맞이해 개최한 것은 선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작용했다. 따라서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의 당내 신분이 '노동당위원장'을 신설하면서 당을 총괄하는 격상된 직위로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한 데 이어 이번 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관철이라는 원칙을 고집하는 조건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은 특별히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화현상은 길어질 공산이 크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강화도 높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한-미동맹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일본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와도 공조를 통해 북핵 불용 입장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무력 의지를 꺾어야 한다.

주제어: 조선노동당대회, 제7차 당대회, 개최배경, 핵보유국, 노동당위원장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7) 2장 및 7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I. 서론

당 우위 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의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당과 국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최고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실제 정치권력도 당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역할도 여타 정치기구 - 정부, 군대 및 근로단체 등에 있어서 우선되는 최고의 조직형태를 갖춘 핵심주체로서 북한의 국가체제를 지탱하며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중요한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대회¹⁾는 북한의 국정을 평가하고 방향을 정하며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대회를 통한 행간들은 변화된 북한체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과거 당대회는 개최 때마다 북한내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대외 조건, 즉 국제적 상황과 남북관계였다. 지금까지 당대회는 모두 일곱 번 열렸으나 마지막으로 개최된 것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였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던 당대회를 36년 만에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평양 4·25문화회관(구, 2·8문화회관)에서 제7차 당대회를 개최했다. 제6차 당대회가 개최된 이래 최악의 경제사정으로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열지 못했다. 특히 북한역사상 국가 존폐까지 치달았으며 2011년 김정일 사후,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7차 노동당대회가 개최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조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당대회에서 국내외 각 분야의 핵심 기조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은 제7차 당대회를 북한의 국내정치, 남북관계, 경제정책, 핵전략, 대미정책 등 각 분야에 대해서 분석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북한 국내정치 분야에서 당대회를 통한 지도체계, 조직 및 정치 엘리트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²⁾ 둘째, 남북관계 차원에서 당대회에서 제시된

1) ‘조선노동당대회’를 향후에는 ‘노동당대회’ 또는 ‘당대회’라고 약술하기로 한다.

2) 이러한 연구는 당대회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통치이데올로기로

통일방안 및 군사회담 제의 등 대남전략에 대한 연구이다.³⁾ 셋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같은 경제개발계획이나 주요 분야의 산업발전 등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⁴⁾ 넷째, 북핵 및 대미정책 등 당대회에서 제시된 핵전략 또는 대외전략에 대한 분석이다.⁵⁾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당대회를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향후 북한의 대내외적 전략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집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떠한 동기와 국내외적 배경으로 인해 당대회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한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왜 이 시점에서 개최해야만 했는지, 또한 개최 후 북한의 정책변화 등 이러한 제7차 당대회 연구의 출발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초

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강조되는 점과 이것이 현 김정은 체제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치과정의 측면에서 당 조직과 직책 변화, 당중앙위원회 및 정치국 상무위원 등 최고 정치 엘리트의 충원 변화, 내각과 외교 분야 정치 엘리트의 변화와 영향력 확대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오일환,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 전략.” 『통일전략』 제16권 제3호, 2016, pp. 9-47; 정성장,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 조직 개편의 의미와 파워 엘리트 변동의 특징.”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북한 경제 전망(세종연구소 제14차 정세토론회)』 성남: 세종연구소, 2016, pp. 1-8.

- 3) 통일정책 및 대남전략에 초점을 두고 당대회를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통일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군사회담 등 대화제에는 있었으나 핵전력이 고도화되는 가운데서 공세적 대남전략 인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김일기·김형수,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통일정책.”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집 제4호, 2016, pp. 221-238; 박휘락, “제7차 당대회 후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 전망.” 『통일전략』 제16권 제2호, 2016, pp. 85-124.
- 4)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서는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의 성격과 경제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쟁점이 존재한다. 김정은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발전 전략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은 악화될 것이고,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실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정치적 구호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국방 및 중공업 부분에서는 보수적일 수는 있어도 시장과 무역 분야에서는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개혁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강희,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제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2016, pp. 113-133. 이창희,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로 살펴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3호, 2016, pp. 94-154;
- 5) 관련 선행연구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당대회를 통해서 핵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직면하게 되는 안보 딜레마가 무엇이며, 향후 북핵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등 군사적 모험주의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한다고 평가하였다. 박광득,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6권 제3호, 2016, pp. 157-191; 정경란,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대미정책 전망 - 미북평화협정 제의를 중심으로 -.” 『통일전략』 제16권 제3호, 2016, pp. 221-244.

하여 구조적 분석을 주로 하되, 논의의 맥락에 따라 분석기법에서는 각종 참고자료들을 이용하여 문헌분석을 기본으로 했으며 이번 당대회 이후 북한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동신문과 특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등 북한에서 발간된 공간문헌들을 활용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조건에서 이전 당대회에서 나타난 정책과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된 당과 국가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국내외 요인을 중심으로 특징과 의미를 분석·평가하며 정책노선의 차이점과 특히 격상된 김정은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북한의 정책전망에 대한 실질적 함의를 찾아 우리의 고려사항과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1. 노동당의 위상과 역할 및 성격

공산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입장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레닌이다. 레닌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하였지만,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는 부르주아지의 정당이든 프롤레타리아의 정당이든 현대적 의미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당 건설 이론은 레닌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⁶⁾ 스탈린은 이를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 하에 형성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당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에서 당 위상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사적 사명은 착취 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개조하여 노동계급화 함으로써 계급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데 있다.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중요한

6) 존 몰리뉴, 이진한 역, 『마르크스주의와 당』, 서울: 북막스, 2003, pp. 19-57.

임무는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며 전 사회를 노동계급화하는 사업이다.⁷⁾ 북한은 수령 개인의 절대 독재를 보장하는 ‘수령의 유일적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를 통해 실현된다고 말하며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이며, 이는 사회주의 건설단계에서 ‘사회의 심장·사회개조의 추진력’으로서 역할을 한다. 당이 사회의 심장이라는 의미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숨 쉬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온 나라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임을 뜻하는데 북한에서 당은 “혁명과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든 사업을 조직 지휘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 영도체계에서 ‘향도적 역량’⁸⁾으로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맥락은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 출발하여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며 혁명의 참모부”가 되었다가, 다시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며 혁명의 참모부”⁹⁾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를 겪어왔다. 노동당은 창당 이래 대내외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성격상 많은 변화를 보여 왔는데 이 같은 변화는 당의 지도이념 및 당면목표와 더불어 조직운영체제와 당세 등에서 그 특색이 잘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 북한의 정치권력구조 내에서 당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회에서 나타난 정책변화의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6차 당대회 당규약에는 노동당의 성격을 맑스-레닌주의의 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제7차 당대회 당규약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¹⁰⁾ 이에 따라 제6차 당대회와 다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6차 당대회 노동당 규약 21조에 의하면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5년에 1

7) 임승남,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pp. 459-460.

8) 정성장,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 세종연구소 엮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p. 114.

9)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20 : 혁명위업 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70.

10)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강조되어 온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3호, 2013, pp. 187-211.

회 당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된 시기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것과 같이, 당중앙군사위원회도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 한다는 조항을 추구하여 군사 분야에서의 당 기능 정상화를 명문화했으며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 한다.
- 2) 당의 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 보완.
- 3)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 4)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추대한다.
- 5)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¹¹⁾ 등이다.

개정된 제7차 당대회 규약은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이는 제6차 당규약과 동일하며 당대회 기능도 동일하다. 다만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당대회 소집 날짜를 6개월 전에 발표한다는 것이 다르다.

2. 노동당의 조직체계 및 운영시스템

조선노동당의 조직기구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제정된 상태에서 변화된 내용도 있으나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당의 위상이 실추되었고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명칭을 중앙군사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상이 격상되었다. 그 결과 당을 통해 정부와 군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군을 토대로 통치되는 선군정치였다.¹²⁾

북한노동당은 제도적으로 당규약에 규정된 역할과 기능에 따라 중앙권력기

11)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Ⅳ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142-143.

12) 김정일 시기 북한의 정치는 선군사상 아래에 선군정치로 작동되었다. 당 규약과 헌법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당이 국가의 모든 활동을 영도하고 지도한다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실제로 그 역할은 국방위원회가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윤왕, “선군정치와 당의 역할,” 강성운 역,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선인, 2010, pp. 251-280.

구가 편제되어 있으나 <표1>과 같이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정무국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비서제와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폐지하여 당이 김정은의 권력집중을 합법적으로 운용을 하는 통로로 조직을 개편했다.

<표 1>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정무국의 구성원 변화

	제4차 당대표자회 (2012.4.11)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2014.4.8)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2015.2.18)	제7차 당대회 (2016.5.9)
제1비서/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비서/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김경희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강석주 김평해 곽범기 오수용	김기남 최룡해 최태복 강석주 김양건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최룡해 김기남[선전] 최태복[과학·교육] 리수용[국제] 김평해[간부] 오수용[경제] 곽범기[계획재정] 김영철[대남정책] 리만건[군수공업]
구성원 수	10명	9명	9명(?)	10명

*주: 2016년 5월 당대표자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명칭이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명칭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바뀜

*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sejong.org> (검색일: 2017. 9. 12)
이종석, “[총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의미와 특징”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2016), p. 5.

특히 김정은은 당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당대회를 활용하여 ‘노동당위원장’ 직책을 통해 그 위상을 과시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1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이전 시대와 비교되는 특징 중 하나는 당을 통한 통치로 당의 지도 및 권위가 강화되는 일련의 경향이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초기 당군, 당정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연구: 위상·권한·엘리트 변화를 중심으로.” 『국

기관으로 정치국·정무국 등 주요 정책결정기관에는 지도부 교체가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고령자만 최소화하여 퇴진시켰으나 결국 당 중앙위원회는 과반이 넘는 200명 내외의 지도부가 교체되어 선출되었다.

Ⅲ. 조선노동당대회와 정치변동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왔다.¹⁴⁾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만큼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 개인보다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항일무장투쟁 전통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개인적 삶의 꾀대가 되어가는 과정은 곧 군사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 전통 자체가 역사적으로 군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각인되는 내용 역시 군사문화였다. 이 전통은 한마디로 항일유격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고난과 난관’을 뚫고 수행하는 유격대원의 삶이 주민들의 학습과 토론 속에서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었다.”¹⁵⁾

북한에서는 항일투쟁을 유일한 정통성의 근거로 하는 선대의 부재 속에 김정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뿐이었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전통의 시스템인 노동당을 선택했으며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창당 이래 역대 당 대회를 거치면서 대내외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성격상 많은 변화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수정을 거듭해 왔다.

<표 2> 북한 역대 당대회 개최 시기 및 특징

	개최시기	당원 수	참가대표	주요특징
제1차	1946.8.28~30	36만6000명	801명 대표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대회

재정치논총, 제53집 제2호, 2013, pp. 69-97.

14) 임승남, “조선로동당략사1”, (서울: 돌베개, 1989), p. 28.

15)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 112.

	(1945년 10월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설치 • 10개 집행부서 설치 • 당 창건 관련보고
제2차	1948.3.27~30	70만8000명	990명(결의권) 96명(발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대회 • 상무위원회 폐지와 조직위원회 신설 • 당규약 수정
제3차	1956.4.23~28	116만4954명	914명(결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복구집중 (중공업 우선주의 원칙 제기) • 당대표자회 신설
제4차	1961.9.11~18	116만6359명	1157명(결의권) 73명(발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과 과시 • 1961~1967년 인민경제발전 계획제시 •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조직위원회 폐지
제5차	1970.11.2~13	비공개	1734명(결의권) 137명(발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강조 • 국방·경제 병진노선 채택에 대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 인정
제6차	1980.10.10~14	비공개	3062명(결의권) 158명(발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후계자 승계 대내외적 공식선언 •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제시 • 정치위원회의 정치국 변화, 정치국상무위원회 신설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채택
제7차	2016.5.6~9	340만명	3467명(결의권) 200명(발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당위원장 추대 • 핵보유국지위명시 • 先核後經 노선 정식화 • 당위원장과 정무국의 신설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채택

* 출처: 이상숙, “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엘리트변동”,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p. 5.

1.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함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조선노동당의 전신인 북조선로동당대회로 개최되어 북조선노동당의 창립함을 공식화했다.¹⁶⁾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또한 조선로동당 강령과 당의 공고화를 위해 당규약을 채택했다.

16)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I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0, p. 57.

그러나 최근 북한은 당대회 역사를 조명하면서 창립대회 개최연도를 “조선 공산당 서북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린 1945년 10월 10일로 수정했다.

2. 제2차 당대회

당 규약상으로 보면, 1년에 1회 정기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7개월이나 늦은 셈이다. 그것은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수립과 임시헌법심의, 그리고 남북정치협상 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연이어 제기되므로 대회소집을 연기해 왔던 것이다.¹⁷⁾ 주요의제는 상무위원회 폐지와 조직위원회 신설 등 북조선노동당 규약을 수정했다. 북조선의 제민주개혁을 확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당중앙위원회의 정치노선과 실제사업을 전폭지시하며, 외세를 엄격히 배격하는 자주통일 노선을 제창하는 단독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대회였으며 이로써 남북 모두 사실상 분단이 공식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3. 제3차 당대회

남·북 노동당의 합당(1949.6)과 3년간의 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 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당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었다.¹⁹⁾ 종래의 규약에는 당 정기대회를 1년에 1회 소집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규약 개정 초안은 당 정기대회를 4년에 1회 소집하게 되었다. 2차대회가 있은 후 8년 만에 개최되었던 제3차 당대회는 그동안 북조선노동당이 조선노동당으로 개편(1949)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당대회로, 당대표자회를 신설했으며, 특히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폐한 전후복구 건설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과제

17) 위의 책, p. 104.

18) 1948년 남북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북한은 미국과 소련 간의 교섭을 통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1946년 3월부터 시작된 미소공동위원회가 5월에 결렬되자 북한의 정치노선에서 혁명을 목표로 한 ‘민주기지론’이 대두되었다. 고유환,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기조와 전개과정,”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통일외교』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 21.

19)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1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0, p. 284.

들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당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4. 제4차 당대회

주요의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네 가지가 취급되었다.²⁰⁾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폐지했고 1961년부터 시작하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제시 등이었다.

5. 제5차 당대회

4차 대회가 있는지 9년 만에 개최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총화보고,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²¹⁾ 이 대회의 특징은 <형제당> 소련을 비롯한 각국의 공산당 대표단들이 전혀 초청되지 않았다. 이는 소련보다는 중국쪽으로 더 접근해 가는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문제와 당내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6. 제6차 당대회

제5차 당대회 이래 10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김일성부자 세습체제로 변신시킨 행사였다.²²⁾ 따라서 김정일을 당대회 집행위원회 29명 중 서열 5위로 선출하여 공식적 후계자승계로 대내외에 선포되었다. 당 지도이념에서 맑스 레닌주의가 삭제되고 주체사상이 유일하게 선택되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방 목표제시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안과 정치국상무위원회 신설 및 비동맹 자주노선 등이었다.

7. 제7차 당대회

20)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Ⅱ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8.

21)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Ⅲ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10.

22)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Ⅳ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2.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김일성은 “1985년까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 목표 가운데 중요한 고지들을 기본적으로 점령하고 1986년에 제7차 당대회를 열려고 한다.”²³⁾며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2차와 제3차 7개년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채 최악의 경제난으로 개최하지 못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는 당위원장과 정무국 신설이었다. 또한 주체사상이 발전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당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되고,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경제-핵병진노선이 정책노선으로 공식화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제1비서 겸 당중앙위정치국위원장·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된 데 이어 이를 뒤 최고인민회의의 12기 5차 회의를 열어 제1비서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이번 당대회 마지막 날인 9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공식 승격되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위원, 인민군 최고사령관, 인민군원수, 최고인민회의의대의원 등 공식직함을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직책은 모두 9개에 이른다. 즉,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정·군의 총체를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제7차 당대회 개최 배경과 의미

1. 제7차 당대회 개최 요인

북한은 대내외 환경 악화로 당대회를 불규칙적으로 개최해왔다. 통상 관례상 당대회 개최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혁명과 건설에 있어 총결기간의 사업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의 경제성과와 눈에 띄는 실적이 없으면 당대회를 가질 명분이 없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 규약에 따르면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당규약 제21조)²⁴⁾, 이후

23) 이상숙, “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엘리트변동”,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p. 7.

24) 제6차 당대회 이전에는 당대회를 4년에 1회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4차 대회부터 제5차 대

당대회를 열지 못했다. 제5차 당대회 이전까지는 이러한 정기대회와 함께 임시대회라는 것을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열리지는 않았다.

이처럼 당대회 자체가 갖는 정치적 효과와 이를 통해 제시된 전략적 노선과 정책의 주장배경 및 상호관계는 이전 당대회까지의 기간을 총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김정은의 정책방향과 권력구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왜 집권 4년 만인 이 시점에서 과감히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그동안 제7차 당대회 개최를 비밀로 부처진 것은 이미 당규약에 따라 개최 6개월 전인 2015년 10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을 열어 제7차 당대회 소집 결정서를 통해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개최 사실은 이미 201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70주년 기념행사를 경축하는 자리에서 당기능의 정상화를 보여주었고, 2016년 초부터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자신감으로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제7차 당대회가 36년 동안 불가피하게 ‘연기’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동구사회주의권 붕괴와 최대우방인 소련의 해체에 따른 경제위기와 고통전가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최악의 경제난은 북한 인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으나, 김정은은 개회사를 통해 “제국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인민 단 한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공세와 압력,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깡그리 가로막아 놓았다.”²⁵⁾면서 이는 인민들의 불만을 외부환경 탓으로 해소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대외무역이 늘면서 경제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그럼에도 낙후된 북한경제가 충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북한 경제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갈등과 논쟁이 존

회까지는 9년이 걸렸으며, 제6차 대회까지는 10년이 걸렸고 다시 제6차 대회부터 제7차 대회까지는 무려 36년이 걸렸듯이 당대회의 회기는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5)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 『노동신문』 2016년 5월 7일.

재하고 있다. 예컨대 이상숙(2016)²⁶⁾은 당대회 추진배경 중에 이른바 국가 재정이 일정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문제가 좋아진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련의 학자들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상황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밝히며 이는 식량상황만 조금 개선되었을 뿐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세계 기준으로도 북한의 변화는 여전히 나타난 것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정은 스스로도 사업총화보고에서 밝혔듯이, “경제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²⁷⁾고 말했다.

경제회복이 여전히 더디며 아직 인민들의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견지해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했다.²⁸⁾ “경제 - 핵 병진노선의 항구적 전략”은 경제와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지만, 이러한 전략은 병진노선이 파생시키는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을 보다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중층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병진노선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 이바지와는 괴리가 있으며 장기간 세습독재와 경제난으로 인한 인민들의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생필품 배급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누적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첫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일 선군시대와는 달리 당중심의 국가 운영, 즉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당-국가체제의 정상화에 대한 욕구로 파악된다. 둘째, 2012년 이후 과거에 비해 일정 정도 회복된 국가 재정이 당대회

26) 이상숙, 『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엘리트 변동』,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27) 근로자 특간호,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평양: 근로자사, 2016), p. 23.

28) 정창현,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제시된 북한의 노선과 정책방향”, 『통일뉴스』 2016년 5월 13일.

개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주관적 판단과 셋째, 2010년 9월 28일,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의가 44년 만에 개최되었다. 당대회 수준의 회의로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였으며, 이는 제6차 당대회로부터 30년 만의 일이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일 총서기의 3남 김정은은 ‘대장’,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세 가지 직위를 부여받아 북한은 3대 세습을 향해 공연히 움직이게 되었다.²⁹⁾ 그리고 후계 기간도 짧은 데다 김정일의 급사 후 권력의 공백으로 2012년 1월, 어떤 실적도 없는 20대 젊은이에게 북한의 권력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번 제7차 당대회를 활용하여 지난 4년간 김정은 체제의 확고한 위상을 과시하고자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집권 5년차를 맞는 시기에 당대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정권의 안정화를 선전하고 대내적으로 당원들을 결속시켜 체제 공고화의 기틀로 삼을 수 있었고 다섯째, 국제사회는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채택하는 등 식량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기 때문에 당대회 개최를 과감히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얻고자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처음부터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있었다. 둘째, 노동당을 장악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김일성 시대의 노동당 중심의 권력구조로 집중 시켰으며 셋째, 조선반도의 공산주의화 달성이며 조선혁명의 위업이라는 이른바 수령(김일성, 김정일)의 선대(先代) 유훈인 적화통일과 강성국가 건설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강성국가 건설은 ‘사상강국-군사강국-경제강국’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당대회를 통해 집권자의 이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추대와 함께 그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향으로 작용되었다.

36년 동안 당대회를 열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 상황일 수

29) 히라이 히사시, 백계문, 이용빈 옮김, 『김정은 체제(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2, pp. 12-13.

밖에 없다. 따라서 당대회를 가질 명분으로 눈에 띄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적 대강을 제시하였으며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도 북한은 당대회 때마다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3차),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4차),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6차) 등 굵직한 정책과 국정운영의 틀을 제시한 바 있다.

<표 3>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

경제발전계획	기간	목표	당대회
신경제개발(제1차) 5개년계획	1957~ 1960	공업화의 기초축성	제3차 당대회
인민경제발전(제1차) 7개년계획 (당대표자대회에서 3년 연장)	1961~ 1970	공업화의 전면적 전개	제4차 당대회
제1차 6개년계획	1971~ 1976	3대 기술혁명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제5차 당대회
완충기	1977		
제2차 7개년계획	1978~ 1984	3대 기술혁명 달성, 대외무역 증진, 운송부문 현대화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목표	제6차 당대회
조정기	1985~ 1986		
제3차 7개년계획	1987~ 1993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물질적, 기술적 토대 구축	
완충기	1994~ 1996	농업, 경공업, 무역 3대 제일 주의 방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6~ 2020	사회주의 강국건설	제7차 당대회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sejong.org> (검색일: 2017. 9. 21)

이종석, “[총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의미와 특징”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2016), p. 15.

따라서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열리지 못하고 제7차 당대회가 무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경제가 풀려야만 당대회를 열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당대회를 개최한 김정은은 정치국 상무위원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함께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양복차림으로 2016년 5

월 7일 당대회 둘째날 개회사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의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대표자 전원이 참가했습니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군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 가운데 여성은 315명입니다. 대회에는 1,387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³⁰⁾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 사후, 3대 권력 즉 당·정·군을 확고하게 장악함으로써 정권불안의 해소와 경제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일종의 권력제도의 체계화시도로 이제부터 자신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대내외에 김정은 통치시대를 펼치겠다는 자신감의 선언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대회 개최는 모두 김일성 주석의 유훈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을 보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을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간다.” 또한 “역사적인 제4차 당대표자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자상으로 높이 들고 나가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수령의 유훈관철전으로 당원들과 인민

30)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 『로동신문』, 2016년 5월 7일.

들을 조직 동원하였습니다.”³¹⁾

유훈(遺訓)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가르침을 말한다. 유훈의 중요성은 북한 전지역에 세워진 영생탑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선대지도자가 남긴 유훈을 후계자가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 당대회 개회사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³²⁾

김정은 제1비서가 2012년 집권 초기에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후광과 정책노선에 많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후 김정일과 차별화된 노선과 정책을 추구한 결과 2014년을 계기로 권력승계를 빠른 속도로 완료하고 김정일의 유훈통치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은의 2017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김정일의 ‘유훈’에 대한 유훈통치는 2014년을 계기로 사실상 종료되고 2015년부터는 김정은의 독자적인 리더십과 노선 및 정책이 강조되었다.

2. 제7차 당대회의 정치적 의미와 목적

북한의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강령과 규약 개정수립, 전략적 과제 제시, 후계자 결정 등 핵심적인 내용으로 개최해왔다.

1980년대 이후 실제로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된 후 북한에 불어 닥친 국제적 상황은 정치·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북한은 제6차 당대회를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파행이 계속되었다. 제6차

31)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32) ‘위의 월간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평양: 근로자사, 2016), p. 5.

당대회 기간인 1980년 10월 13일 조선로동당 당규약 전문을 보면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데, 3개월 전에 소집기일과 의정을 공고하여 당대회를 개최한다. 당대회의 대표자 선출은 당중앙위원회가 그 비율을 정하며 이들 대표자들도 도(道) 당대표회, 시(市)(구역)·군(郡) 당대표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³³⁾고 했다.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한 후 중앙당 총비서로부터 각 시, 도 책임비서들이 해당 지역의 사업총화를 보고하여 당대회 기간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며 그에 따른 전망과 과업을 제시하고, 당중앙검사위원회에서 당 재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지지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뒤 최고인민회의의 12기 5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 제1비서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현실적으로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나 당정치국에서 이미 결정한 중요 정책을 선언하거나 비준하는 역할에 그친다. 특히 대의원의 수가 3,220명(제6차 당대회 당시)에 달했기에 실질적인 정책을 형성하거나 활발하게 토론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으며, 당대회는 당중앙조직 21소에서 밝혔듯이 4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에서 소집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부터 당대회 시기를 크게 넘겼는데, 특히 제5차 및 제6차 당대회는 각각 9년 만에 열렸으므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할뿐더러 적당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7차 당대회 역시 여러 차례 소집시기를 지연시키며 최장 지연기간으로 기록했는데 가장 큰 사유는 1990년대 닥친 고난의 시기와 북핵문제 발생 등으로 인한 대내외 환경악화에 따른 정세불안과 긴장고조가 가중되고 경제위기로 이어져 이전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적 과업성취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의 개선 또는 새로운 개선 전망도 불투명하여 이러한 환경은 당대회 개최를 위한 조건이 되지 못했다.

33)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Ⅳ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142-144.

V.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결정된 대내외 정책방향

1. 북한의 대남정책

김정은은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대남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자주적 통일을 제시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했으며 세계의 자주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또한 올해 신년사에서 대남정책으로 자주통일 새 국면을 열어야 되는 해가 돼야 된다고 통일의 필요성과 남북관계개선에 노력을 강조했으나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여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고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강변하며 기존입장인 세계 비핵화와 함께 북한 비핵화가 아닌 수평적 비확산 의지만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남북관계의 파국 원인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만 주장하며 핵개발의 중단은 결코 내놓지 않은 채 오히려 핵보유의 강한 의지만 드러냈다. 또한 파탄 원인을 우리정부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추종하여 동족적대시정책을 취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결상태에 처했다고 비난하며 그 책임을 우리정부에 떠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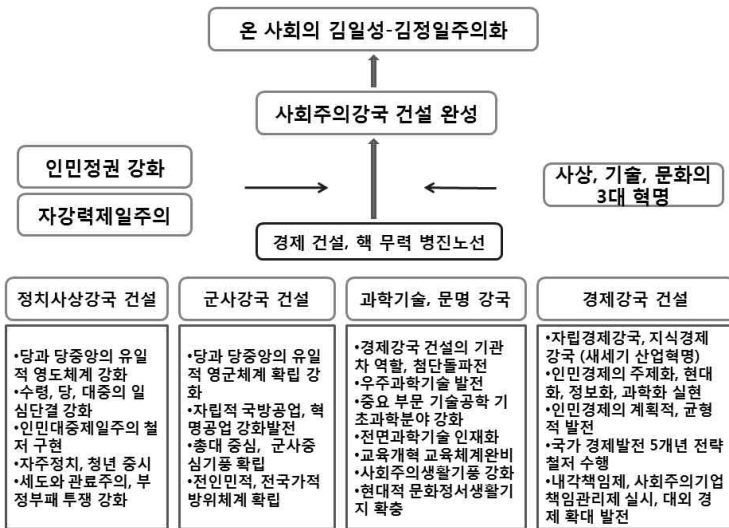
북한은 국가전략 목표인 핵보유를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 실전배치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와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어렵기 때문에 체제 안보를 지키고 대남 군사우위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³⁴⁾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하거나 핵 위협 등 군사적 강압을 실행할 가

34)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와 이에 따른 대남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근식,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해법: “포괄적 평화”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7, pp. 40-43.

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핵개발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한반도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 방안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림 1〉제7차당대회 - 주요노선



*자료: 중앙일보 2016년 5월 13일

2.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1) 북미 대외관계의 악화

(1) 미국에 대해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및 주변나라들에게 통일에 도움 되는 행동을 할것을 촉구

(2) 核 관련, 미국의 한미군사훈련 등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주축으로 한 자위적 국방력·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주장

(3)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 이념 아래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확대발전에도 노력³⁵⁾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전쟁연습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핵무력 증추선제공격 능력강화'를 대외정책으로 밝혔다. 핵전략을 완성시키며 핵문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로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비핵화이자 '세계 자주화위업' 실현의 문제로 범주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핵보유를 전제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전략도 과거처럼 체제 인정과 안전 보장을 미국에 요구나 구걸하지 않고 협상도 갖지 않으며 미국과 동급으로 맞서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총화보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협상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끊임없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도발의 강도와 대화는 매우 공세적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2)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 부재와 북중 관계 전망

김정은 제1비서는 2014년과 2015년 신년사에서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견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2016년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핵실험은 강행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핵개발 병진노선에 대해 부정적인 중국을 의식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2015년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방북한 류윈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의식해 핵에 대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35) 통일부, 2017년 「北 신년사」 분석 2017년 1월 1일, P. 4.

여 북한이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야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2015년부터 북·중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3) 선군정치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노동당의 영향력 확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신년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선군(先軍)에 대해서는 2012년에 17회였으나, 2013년에는 6회, 2014년에 3회, 2015년에 4회, 2016년에는 2회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에 대해서는 “2012년에 49회, 2013년에 40회, 2014년에 47회로 큰 변동이 없다가, 2015년에 53회, 2016년에는 60회로 증가했다.”³⁶⁾

2017년 신년사에서 나타난 당의 역할은 전례 없이 강조되었고 군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도 대폭 강화되었다. 따라서 국가기구와 사회에 대한 당의 영향력 역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Ⅵ.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의 평가와 과제

제7차 당대회라는 형식의 장치를 통해 언고자하는 효과는 내용 측면뿐만 아니라 당대회 자체가 갖는 효과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당대회는 북한의 대외 전략인 핵문제와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종래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새로운 다른 방향을 제시한

36) 정성장, "2016년 김정일의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세종정책브리핑 2016-1), 2016.

것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치부문에서는 새로운 ‘노동당위원장’으로 권력 강화에 있었고, 핵무기 개발로 인한 체제안정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당대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제사회와 긴장상황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운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므로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향후 변화된 대외정책을 가늠하는데 무리가 있다. 북한지도부는 고강도 경제제재를 받으면서도 핵심 화두인 경제 - 핵 병진노선을 기축으로 하는 항구적 전략적 노선으로 원칙을 분명히 채택했다. 이 노선을 통해 경제발전전략의 선경(先經)을 강행함으로써 오히려 서방세계의 대북 제재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과시적 태도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의 통치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대내 분야에서는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제7차 당대회는 향후 경제 외에도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핵능력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비서의 승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며 권력승계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결과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달리 차별화된 정책과 노선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되며 장기적인 집권 구상을 이번 당대회를 통해 구체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김정은의 독자적인 리더십과 정책이 강조되었고 제7차 당대회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토대로 삼았으며, 이는 곧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개최되는 당대회를 통해 그동안 유훈통치를 끝내고 이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와는 달리 당의 정상화를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의 조선노동당’임을 선포하고 북한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밝혀 정권이 안정적이라는 기대효과를 얻고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로동당 제7차당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

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한 의정을 토의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³⁷⁾

북한이 의미를 부여한 당의 ‘최고 수위’ 당위원장은 1949년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이 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할 때 김일성이 맡았던 직책이다. 할아버지처럼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고, 아버지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책에서 당으로 중심축을 옮겨 3대 세습 왕조의 계승자로 ‘셀프 대관식’까지 마친 후 나흘간의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정은은 당과 국가기구에서 김정일 사후 조선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북한을 잠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통상적으로 당대회는 변화된 새로운 정세,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밝히는 행사지만, 36년 만에 개최된 이번 당대회는 실제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김정은 개인 권력 강화 확립의 국내행사로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었다.

단순히 김정은 정권의 대남·대외정책기조를 재확인하고 김정은의 독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정권 이익기에 나타났던 불안정성을 딛고 새로운 모습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선전하는 상징적인 정치적 내부행사로 지적을 받았다.

김정일의 공식 직함에도 ‘국방위원장’으로 뒷받침하듯 김정일 시대까지 북한은 선군 즉 군부의 힘을 바탕으로 이끌어 왔으며 당 관료들의 힘이 조선인민군들의 힘보다 비교적 작았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에서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노동당의 최고 의결 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을 선출하면서 절반이 넘는 54.9%를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³⁸⁾ 이는 당 지도부를 대폭 쇄신한 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당 관료들의 역할은 증대되고 대신 군부 원로들을 퇴진시킴으로서 권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자신감을 밑바탕에 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37) 근로자 특간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 (평양: 근로자사 2016), p. 56.

38) 정성장, 『북한 로동당 제7차 당대회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2016).

부분은 내각총리 박봉주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는데, 박봉주는 북한 내부에서 드물게 개혁적인 성향의 경제전문가이다. 이는 경제건설에 대한 군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수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의 변화

	제4차 당대표자회 (2012.4.11)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 (2013.8.25)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 (2014.3.16)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 (2014.4.26)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 (2015.2)	제7차 당대회 (2016.5.6)
위원장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부위원장	최룡해 리영호	최룡해	최룡해			
위원	김정각 김영춘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경성 장성택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	장성택 리영길 장정남 김영춘 변인선 김원홍 주규창 김경옥 김명식 김명식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겸 (김수길) (서홍찬)	리영길 장정남 김영춘 변인선 김원홍 (주규창) 김경옥 김명식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겸 김수길 서홍찬 (황병서)	황병서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김원홍 김경옥 김명식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겸 서홍찬 박영식	황병서 현영철 리영길 김원홍 서홍찬 김춘삼 박영식 리병철 김명식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최영호 김락겸	황병서 박봉주 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리만건 김원홍 최부일 김경옥 리영길 서홍찬
구성원 수	19명	19명(?)	19명(?)	16명(?)	16명(?)	12명

주: 선출 또는 소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괄호 안에 표기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sejong.org> (검색일: 2017. 9. 30)

이중석, “[총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의미와 특징”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2016), p. 10.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전략으로 특히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장을 강조했다.³⁹⁾ 북한의 핵무력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 심각한 군사적 비대칭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위기불안으로 한·미·일은 물론 특히 그동안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러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당대회 자체가 갖는 김정은의 독재권력 강화의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북 경제제재 내용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국제적 압력의 조치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핵화선언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동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는 비관적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VII. 결 론

북한체제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당대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제7차 당대회의 개최배경과 특징을 분석·평가하고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위상과 북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찰하였다.

집권 5년 차를 맞이하여 선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김정은 시대 선포를 통해 체제 안정화를 대내외에 알리고자하는 조급함에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예상한 기획의도에 맞게 나흘간 진행된 제7차 당대회를 토대로 김정은의 당내 신분이 ‘제1비서’가 아닌, ‘노동당위원장’을 신설하면서 격상된 직위로 당을 총괄하는 1인 지배체제의 시작과 김정은의 사당(私黨)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뒀을 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 제시 없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또한 대내외정책에서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정책을 고집하며 선대

39) ‘핵보유국’에 대한 강조는 북한이 기존부터 증시해온 군사력 강화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무력을 포함해 “강력한 군사력에 토대하여 나라의 전반적 부문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경철, “나라의 군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하기 위한 중요방도,”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2호(루게 제42호), pp. 11-12.

의 유산을 답습하는 등 현실과 상호 괴리된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새로 맡은 직위 ‘조선노동당위원장’은 최고지도자로서의 직함을 가짐으로써 권위를 새롭게 정립하고 당중심의 정치적 명분확보와 동시에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였다. ‘노동당위원장’ 직위는 김일성 주석이 1949년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을 통합하면서 임시로 만들었는데 이는 67년 전 할아버지 직책을 부활시킴으로써 정치적 계승과 김일성 주석과 자신을 동시에 부각시켜 동일한 반열에 올리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7차 당대회는 여러 면에서 이전 당대회와 닮은꼴로, 제6차 당대회가 김일성-김정일 공동통치를 통한 후계자 김정일시대 선포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당대회는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김정은 체제의 권력승계를 마무리하며 유일지배체제 시작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본격 선언하는 공식직책을 내세움으로써 지난 4년 동안 ‘당 제1비서’로서의 과도기적 유신통치를 매듭짓고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본격화했으며 집권 후 유일지도체제는 유일영도체계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의 정치사상에 집착하는 김정은만의 대관식이 거행된 행사였다.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이었던 제6차당대회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한 데 이어 이번 당대회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계승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당의 지도이념으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김일성의 국방 우선 정책과 김정일의 선군정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⁴⁰⁾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와 핵무력건설 노선은 철저히 관철할 것이며 ‘경제-핵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노골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핵보유국 지

위를 인정받으며 체제와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는 속셈과 핵 군축 협상의 댓가로 경제난은 미국을 상대로 얻어내겠다는 향후 행보(行步)가 예상되지만 중요한 의미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는 전혀 괴리된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로 인한 긴장고조완화의 외부적 요인이 뒷받침되지 않고 바람직한 정책 변화를 통해 경제개선 조치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대북 경제제재와 맞물려 경제난이 가중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체제안정은 물론 심각한 상태로 급속히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핵무장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핵보유국 선언”과 “경제-핵 병진노선”의 항구적 전략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더욱더 촉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당·정·군의 일인자로 등극함으로써 스스로 핵보유국 주장과 경제-핵 병진노선의 항구적 전략 노선을 고집하는 조건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절충점 찾을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향후 남북관계 개선은 특별히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색국면과 악화현상은 길어질 공산이 크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강화가 촉진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비롯해 특단의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전략을 다시 짜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국제사회의 협력과 특히 대외 핵심적 기동인 한-미동맹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국가들과도 공조를 통해 북핵 불용 입장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무력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0) 근로자 특간호,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평양: 근로자사, 2016), p. 45.

참고문헌

〈국내 저서〉

-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일가·김형수,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통일정책.”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집 제4호, 2016.
- 김창희,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제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2016.
-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3호, 2013.
- 김근식,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해법: “포괄적 평화”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7.
- 윤환, 강성운 역, “선군정치와 당의 역할.”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선인, 2010.
- 박광득,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6권 제3호, 2016.
- 박휘락, “제7차 당대회 후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 전망.” 『통일전략』 제16권 제2호, 2016.
- 오일환,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 전략.” 『통일전략』 제16권 제3호, 2016.
- 고유환,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기조와 전개과정,”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통일외교』,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이상숙, IFANS 주요 국제문제분석 “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엘리트변동.”,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 이종석, “[총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의미와 특징.”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2016.
- 이창희,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로 살펴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3호, 2016.
- 임승남,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 “조선로동당략사”, 서울: 돌베개, 1989.
-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연구: 위상·권한·엘리트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2호, 2013.
- 정경환,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대미정책 전망 - 미북평화협정 제의를 중심으로 -.” 『통일전략』 제16권 제3호, 2016.
- 정성장, “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세종정책브리핑 2016-1, 2016.
- _____,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 세종연구소 엮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_____,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2016.
- 정창현,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제시된 북한의 노선과 정책방향.” 『통일뉴스』 2016년 5월 13일.
- 김경철, “나라의 군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중요방도,”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2호(루계 제42호).
-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Ⅰ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0.
- _____ 第Ⅱ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第Ⅲ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第Ⅳ輯,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존 몰리뉴, 이진한 역, 『마르크스주의와 당』, 서울: 북막스, 2003.
- 통일부, 2017년 『北 신년사』 분석 2017.
- 히라이 히사시, 백계문, 이용빈 역, 『김정은 체제(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2.

〈북한 문헌〉

- 근로자 특간호,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평양: 근로자사, 2016.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20 : 혁명위업 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로동신문』 2016년 5월 7일.
, 2016년 5월 8일.

〈기타〉

- 중앙일보 2016년 5월 13일
<http://www.sejong.org> (검색일: 2017. 9. 12)

Abstract

A Study on the Backgrounds of the 7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 With a focus on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Kim Byung Wook(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backgrounds of the 7th congress of Workers' Party of Korea and examine the policy directions of North Korea revealed at the congress.

Party congresses hold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of changes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e overall policy trends of North Korea are officially approved at the congress of Workers' Party of Kore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event in North Korea. It is thus possible to estimate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policy lines of the congress and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backgrounds of the congress.

There were total seven congresses of Workers' Party of Korea. The last one before the 7th congress took place in 1980. The 7th congress was held in 2016 after 36 years when no congress was held during the regime of Kim Jong-il. Not a single congress was held for 36 years because North Korea was in the worst economic hardship. Kim Jong-un decided to hold the 7th congress in the fifth year of his regime despite no improvement of economic situations in the n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in 2011 in order to grow out of his predecessor's influence and promote the stabilization of his regime home and abroad.

At the 7th congress, he created a new position called "Chairperson of Workers' Party of Korea" for himself and raised his status to the overall control of the Party, thus marking the official launch of his regime through the transmission over three generations.

He stipulated the term "nuclear state" in the Constitution in 2012 and insisted on the principle of "responsible nuclear state" at the 7th congress. Under those condition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relationship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improve in the future. There is rather a huge possibility of deterior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 global community will reinforce its strong sanctions on Nor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work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nsure the strong South Korea-the U.S. alliance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entire world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also solidify its position of allowing for no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by collaborating with Japan, China, and Russia and persuade it to give up nuclear weapons through sanctions and pressure.

Keywords: the 7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background of the congress,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chairperson of Workers' Party of Korea, nuclear state

투고일 : 2017년 10월 15일 • 심사일: 2017년 12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22일

